

▣ 별첨 자료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후보자 전체명단 35명 (가나다 순)

X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 반대 명단



								
강기윤(국민의힘)	권철승(더불어민주당)	김기현(국민의힘)	김도음(국민의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성원(국민의힘)	김용판(국민의힘)	김희재(더불어민주당)	박대출(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박성중(국민의힘)	박완주(무소속)	박정하(국민의힘)	박진(국민의힘)	배현진(국민의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유경준(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유의동(국민의힘)	윤두현(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이명수(국민의힘)	이원욱(개혁신당)	이중성(국민의힘)	이현승(국민의힘)	임이자(국민의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정진석(국민의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조경태(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	하태경(국민의힘)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당별

정당명	인원 수	후보자 이름
국민의힘	26명	강기윤(경남 창원성산구), 김기현(울산 남구),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용판(대구 달서구), 박대출(경남 진주시), 박덕흠(충북 보은읍천영동괴산군), 박성중(서울 서초구), 박정하(강원 원주시), 박진(서울 강남구), 배현진(서울 송파구), 유경준(서울 강남구),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유의동(경기 평택시), 윤두현(경북 경산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이명수(충남 아산시), 이종성(비례), 이현승(부산 진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시),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경태(부산 사하구), 주호영(대구 수성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태영호(서울 강남구 → 서울 구로구),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7명	권칠승(경기 화성시), 김병욱(경기 성남분당구), 김희재(전남 여수시), 신현영(비례), 전해숙(서울 광진구), 정청래(서울 마포구),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개혁신당	1명	이원욱(경기 화성시)
무소속	1명	박완주(충남 천안시)

● 공천부적격 후보 추천 다관왕

	인원 수	후보자 이름
6회 이상	1명	추경호(국)
4회 이상	1명	김성원(국)
3회 이상	9명	김기현(국), 김병욱(민), 박덕흠(국), 신현영(민), 윤상현(국), 이종성(국), 임이자(국), 정진석(국), 주호영(국)
2회 이상	14명	김용판(국), 김회재(민), 박대출(국), 박성중(국), 박완주(무), 배현진(국), 유경준(국), 윤두현(국), 이원욱(개), 이헌승(국), 정청래(민) 조경태(국), 태영호(국), 하태경(국)

# 비고\_(국) : 국민의힘, (민) : 더불어민주당, (개) : 개혁신당, (무) : 무소속

● 선정 분야 및 기준

선정분야	선정기준	
기후환경 분야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김기현(국), 김성원(국), 김희재(민), 박대출(국), 박덕흠(국), 윤상현(국), 이현승(국), 임이자(국), 정진석(국), 조경태(국), 주호영(국), 추경호(국), 태영호(국), 허영(민)
안전평화 인권종교분야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김기현(국), 김희재(민), 박대출(국), 박완주(무), 이현승(국), 정진석(국), 조경태(국), 태영호(국), 하태경(국)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선거제 개혁 및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김기현(국), 유상범(국), 조경태(국)
언론 역사 분야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박성중(국), 박진(국), 배현진(국), 유상범(국), 윤두현(국), 정진석(국), 태영호(국), 하태경(국)
복지노동 보건의료 분야	노동협을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강기윤(국), 김병욱(민), 김성원(국), 김용판(국), 박덕흠(국), 박정하(국), 신현영(민), 유의동(국), 윤두현(국), 이명수(국), 이원욱(개), 이종성(국), 임이자(국), 전해숙(민), 주호영(국), 추경호(국)
민생경제 분야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권철승(민), 김기현(국), 김도읍(국), 김병욱(민), 박성중(국), 배현진(국), 유경준(국), 윤상현(국), 이원욱(개), 이종성(국), 정청래(민), 조경태(국), 주호영(국), 추경호(국), 태영호(국)
사회적 논란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김성원(국), 박덕흠(국), 배현진(국), 신현영(민), 태영호(국), 하태경(국)
정부·권력기관 출신	대통령실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김용판(국), 박진(국), 추경호(국)
자질 부족 및 기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박덕흠(국), 박완주(무), 윤상현(국), 이명수(국), 정진석(국), 추경호(국), 하태경(국)

## 2. 1차 공천반대 후보자 명단 선정 경과와 기준, 방식

### ● 선정경과

- 1/31(수) 2024 총선넷 출범 기자회견 통해 각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유권자들에게 공천부적격자 추천을 공개 요청
- 1/31(수)부터 2/14(수)까지 약 2주간, 전국 10여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국회의원 중 총 89명을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추천함.
  - 1/17(수)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34명 공천배제 및 자질의심 106명 검증철회 명단 발표
  - 2/05(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10인 선정 및 발표
  - 2/08(목) 한국환경회의,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 30인 명단 발표
  - 2/14(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지역 총선 출마 부적격후보 현역 국회의원 2명, 원외 인사 8명 선정 발표
  - 2/15(목) 대구 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부적격 후보 11명 발표
- 총선넷 운영위원회는 각 단체에서 제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자체로 조사한 명단에 대해,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 확정함.

### ● 선정기준 및 방식

- 2024 총선넷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노동협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총선넷은 위 기준을 충족하여 제안된 공천부적격자 89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세 기준을 병합 적용해 35명의 1차 명단을 확정함.
  - (1) 총선넷이 선정한 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보자
  - (2) 총선넷이 선정한 개혁법안을 저지하거나, 후퇴시키는 반대법안을 대표발의한 후보자
  - (3) 각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 위원장, 간사 등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후보자
  - (4) 대통령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로서 반개혁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책임이 있는 후보자
  - (5)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 (6) 공식 회의석상이나 방송, 언론을 통해 차별혐오 발언, 유권자와 국민을 폄훼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7) 여러 단체에서 공천부적격 후보로 추천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2024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된 후보자
  - (8) 2016년 총선넷의 집중낙선명단에 선정되었거나 2020년 공천 부적격 다관왕 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

### 3. 1차 공천반대 후보 명단과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요경력	제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a href="#">&lt;디지털헬스케어법&gt; 제정안</a>, <a href="#">&lt;의료법&gt;</a> 및 <a href="#">&lt;약사법&gt; 개정안</a> 대표 발의 :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이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있음.</p> <p>(2)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해 환자 안전 위협하는 <a href="#">&lt;첨단재생바이오법&gt; 개정안</a> 대표 발의 : 현행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임.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은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고 있음.</p> <p>(3)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이 될 <a href="#">&lt;의료법인 인수합병&gt; 허용 의료법 개정안</a> 공동 발의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임. 또한 이제까지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 혜택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됨. 세제 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사고팔아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손실될 것임.</p>

## (2)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주요경력	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안단체	경실련
선정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2.~2022.5.) 재직 당시, 벤처기업을 재벌세습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원칙을 훼손하는 <a href="#">‘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정부안)</a>의 본격적인 통과를 추진함.</p> <p><a href="#">2021년 11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a>에서 “정치는 1인 1표인데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1원 1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법의 무슨 큰 신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법 내에도 1인 1표를, 1원 1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며 통과를 촉구하였음.</p>

### (3)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주요경력	제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전) 울산광역시장
제안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연대
선정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li> <li>-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li>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li> <li>-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li> <li>-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li> </ul>
구체적인 선정사유	<p>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이 큼. 나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편입 발언,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원정수 30명 축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 선거용 포퓰리즘 발언을 내놓음. 2021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종교기관을 방문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동성혼, 동성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혐오발언을 함.</p> <p>(1) <a href="#">2023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a>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함.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을 이유로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임.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참여인원과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법안임.</p> <p>(2)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p>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략)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3) 야당 시절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3년 7월](#)에는 기자들에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선동’으로 폄훼 왜곡함.

(4) [202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핵무장을 통한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음.

(5)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개혁법안임에도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2021년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 [2022년 12월에는 세종성시화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 축사](#)를 통해 "동성혼,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혐오차별 발언을 함.

- [2022년 5월 16일,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잘못된 정교분리의식이 기독교적인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서포트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 20조 2항의 정신을 위배한 발언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정치적 현안에 적용시키기도 함.

- 이외에도 [2019년 울산시장 당시](#) 대표적인 극우 기독교 인사인 전광훈씨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등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왔음. 종교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평가함.

(6)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김기현 의원의 경기도 서울편입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4)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참여연대
선정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법안들을 심의하지 않거나, 3개월 뒤에 심사소위에 회부하는 식으로 타 상임위원회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킴. 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행위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임.  (2) 2023년 1월 <a href="#">양곡관리법 개정안</a> 과 <a href="#">방송3법 개정안</a> , 2023년 3월 <a href="#">노란봉투법</a>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3개월 가까이 심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그제서야 뒤늦게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회부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등의 꼼수를 일삼음.

**(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름(정당명 / 지역구)	<b>김병욱</b>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주요경력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분야, 민생경제분야
선정기준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의사결정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 바 ‘3%룰’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김병욱 의원은 해당법안이 후퇴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김 의원은 <a href="#">2020년 11월엔 언론</a>을 통해 “타협안, 조정안이 나와줘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규제”라며 발언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데 일조함.</p> <p>(2)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기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a href="#">벤처기업특별법</a> 및 <a href="#">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a>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p> <p>(3)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위한 <a href="#">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을 대표발의</a>하고 추진함.</p> <p>(4)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a href="#">중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a>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p>

- (5)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시킴. 이 법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 (6) 기업의 접대비 악용을 초래하고 과세를 불투명하게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6)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p>주요경력</p>	<p>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 미래통합당 대변인</p>
<p>제안단체</p>	<p>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li> <li>-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비대면진료에 대해 규제 없이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a href="#">친기업적 비대면진료 초진 상시화 법안 대표 발의</a>함</p> <p>(2) 광고 플랫폼 업체의 편의 개선 및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광고 심의 규정 관련 <a href="#">&lt;의료법&gt; 개정안 공동발의</a>함.</p> <p>(3)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복구를 명분 삼아 긴급재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긴 <a href="#">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a>함</p> <p>(4) 2021년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a href="#">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a>을 공동발의했으나, <a href="#">2023년 9월 국회에서 진행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a>에서 “오염 처리수는 정쟁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며 “IAEA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수산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오염 처리수가 아닌 가짜 뉴스와 괴담 선동”이라고 발언하며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폄훼하고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며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음.</p>

	<p>(5) 2022년 8월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참석하였으나 수해에 고통받는 피해자들 앞에서 “<u>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u>”와 같은 막말을 함.</p>
--	---

(7)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현재도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면책 범위가 충분히 넓은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고 경찰관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우려를 심화시키는 <a href="#">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a>하여 처리시킴.</p> <p>(2)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수서경찰서)이 수사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주도로 한밤중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음. 이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a href="#">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 끝에 무죄 판결</a>을 받았음. 하지만 공직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됨.</p> <p>(3)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상업화할 <a href="#">의료법 개정안</a>,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a href="#">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a> 등 의료민영화법을 공동발의함.</p>

**(8)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p>주요경력</p>	<p>제 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p>
<p>제안단체</p>	<p>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p>
<p>선정기준</p>	<p>-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이라고 명명하며, 본래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홍보함. (<a h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p> <p>(2) 지역 개발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a href="#">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a>, <a href="#">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을 대표발의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이라고 홍보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경 보호 법률을 형해화하고 규제를 완화함.</p> <p>(4) <a href="#">2021년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a>를 열어 “성별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남자인 제가 여자라 주장하면 상대방이 여성이라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왜곡과 혐오를 선동함.</p>

[2022년 12월 세종 송담교회에서 열린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라고 발언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9) 박대출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안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2023년 3월 오염수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자 SNS(페이스북)에 " <a href="#">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에 이어 이제는 북한발(發)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이나</a> "고 폄훼하고, " <a href="#">북한이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는 지령 내린 뒤</a> ,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심전심이나 아니면 '남조선민주당'이나"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시민들로 폄훼하고 색깔론을 펼침.  (2) <a href="#">2023년 4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a> 에서 “이 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난정치법입니다. 국민적 아픔인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로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폄훼하고, <a href="#">2023년 9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a> 에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을 폄훼하고 색깔론을 일삼음.  (3)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성소수자 패널로 출연시킨 EBS '까칠남녀' 프로그램에 대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음란, 퇴폐 수준의 방송"이라며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문책 주장

(10)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a href="#">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수산물판매장을 방문</a> 해 “야당이 과학을 외면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천일염·미역·다시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사드 등 숱한 괴담이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이후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  (2)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6건을 공동발의함. < <a href="#">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a> >, <a href="#">병원 인수합병 &lt;의료법&gt;</a> , <a href="#">비대면진료 &lt;의료법&gt; 2건 ([21180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a> < <a href="#">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a> > 2건 ( <a href="#">[210144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a> , <a href="#">[210555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a> )  (3) 의원 본인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와 관련해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a href="#">국회 윤리심의위원회에 제소</a> 됨. 이 부분은 이후 경찰에 의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음.  (4)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과 2017년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됨.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p>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함.</p>
--

(11) 박성중(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p>주요경력</p>	<p>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 바른정당 원내부대표                  (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p>
<p>제안단체</p>	<p>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li> <li>-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TV수신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a href="#">‘수신료 갈취 거부법’</a>,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a href="#">‘가짜뉴스 생산자 처벌법’</a> 등의 법안을 발의함.</p> <p>(2)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긍정 평가하고 <a href="#">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a>하는 등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왔음.</p> <p>(3)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a href="#">중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a>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p> <p>(4)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3건, 부자감세법 2건,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p>

**(12) 박완주 (무소속, 충남 천안시을)**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2022년 5월 12일 성범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제안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선정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건 이후 신고가 있기까지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의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 등의 회유를 시도하고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것처럼 주변에 말하는 등 <a href="#">2차 가해를 저지름</a> . 해당 보좌관(피해자)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보좌관이 아닌 <a href="#">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한 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하며 의원면직을 시도함</a> . 2022년 5월엔 해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함.

**(13) 박정하 (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제안단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a href="#">‘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a> .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지만, 당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박정하 의원이 다시금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임. 영리병원은 투자에 대한 배당을 가능케 해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임.

**(14) 박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주요경력	제16대, 17대, 18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 (전) 외교부 장관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정무비서관
제안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선정분야	언론역사 분야
선정기준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외교부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핵심 책임자임.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는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이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인 방안임.

(15)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MBC 아나운서
제안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선정분야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a href="#">[210008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a></p> <p>(2)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최종 통과된 법안은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구간 범위도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a href="#">[211613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3인)</a></p> <p>(3) 언론인 출신임에도 각종 사안에 있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부의 언론탄압 시도를 축소 옹호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대해, 출판 및 독서 문화를 통해 북한을 안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실상은 북한의 체제를 남한과 동일시하는 전시자료 및 책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함. <a href="#">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배 의원이) 자의적 기준의 색깔론으로 해당 전시회와 출판 도서를 재단했다”며 사과를 촉구함(2020.10.23.)</a>.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의 일부 문구만을 발췌해 편집, 연결해 놓은 부분을 예시로 들어놓고 전체 맥락과는 다르게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하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배 의원</p>

주장을 반박함([문화체육관광부, 2020.10.23](#))

‘치졸한 언론탄압’이라 비판받은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대통령실이 MBC에는 전용기에 동행하는 순방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탄압 행위의 의미를 ‘순방 취재 편의 미제공’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옹호함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11.10](#)).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파문에 대해 ‘말리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면서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일 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머다하고 이래야겠나”라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옹호함([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09.23](#)).

(16)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현) 2022.09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2023.06 제21대 국회 하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응급환자 사망시 의료인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 등 특혜를 제공하는 필수의료육성지원법, 의료사고 보상액을 가해 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p> <p><a href="#">[21172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5인)</a>          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하도록 함.</p> <p><a href="#">[21158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3인)</a>          법안 주요 내용: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p> <p><a href="#">[212264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5인)</a>          법안 주요 내용          제12조(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필수의료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관계기관이 필수의료종사자의 교육 또는 수련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p>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1156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법안 주요 내용

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나. 환자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46조 제3항).

(2)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남편과 동행해 현장에 합류,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20분가량 지연시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됨([연합뉴스, 2022.12.22](#))

(17)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통계청장
제안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선정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남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여 처리함.</p> <p>-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함. <a href="#">[21011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a></p> <p>-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구간 범위를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a href="#">[21175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a></p> <p>-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3구 및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노후도시재생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해당 법안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a href="#">[2103895]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의원등17인)</a></p> <p>- 이밖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실거주</p>

의무를 폐지하여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삼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2119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1인\)](#)

(18)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p>주요경력</p>	<p>제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p>
<p>제안단체</p>	<p>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민주주의정치개혁 분야, 언론역사 분야</p>
<p>선정기준</p>	<p>-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유상범 의원은 2020년 10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직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u>을 대표발의하여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p> <p>(2) 2022년 04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라며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를 지지,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p> <p>(3)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야의 추천권을 크게 줄여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명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u>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대표로 청구하여 무력화를 시도</u>,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행보에 앞장섬.</p> <p>(4) 2023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라도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 “열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현재 300석 국회의원 정족수의</p>

	<p>구성은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혐오에 편승해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수 축소를 주장.</p>
--	--

**(19)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p>주요경력</p>	<p>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전) 제21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p>
<p>제안단체</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p>
<p>선정분야</p>	<p>복지노동 분야</p>
<p>선정기준</p>	<p>-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책임이 더 무거움.</p> <p>(1) <u>2023년 10월 31일 원내대책회의</u>에서 당정이 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큰 방향을 밝히며 “(현행)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발언함. 이는 공공정책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함.</p> <p>(1) 2023년 4월 7일 국민연금 폐지론자가 참여하고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패널을 초청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를 퇴행, 개악 방향으로 추진하는 <u>토론회</u>를 주도하며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제도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p>

(20) 윤두현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p>주요경력</p>	<p>제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전) YTN플러스(디지털YTN) 대표이사 사장                  (전) YTN 보도국장</p>
<p>제안단체</p>	<p>민주언론시민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선정분야</p>	<p>언론역사 분야, 보건의료 분야</p>
<p>선정기준</p>	<p>-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윤두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2TV 폐지에 목소리를 높임. 특히 윤두현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u>2023년 9월 뉴스타파·KBS·MBC 기자 등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언론자유 훼손에 앞장섬.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을 대표발의함.</p> <p>(2) <u>2023년 12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u>에서 윤두현 의원은 "기업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운영하게 가급적 간섭 안 하는 게 좋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포털 규제를 시장에 맡겨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고 제안하는 등 편향적 언론관에 따라 정권 비판언론을 탄압하며 공영방송 민영화에 적극 나섬.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YTN 보도국장을 지내며 정부 비판보도를 통제해 <u>YTN노조(언론노조 YTN지부)가 뽑은 ‘YTN 5적’</u>으로 선정된 바 있음.</p> <p>(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u>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u>을 대표발의함.</p>

**(21)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p>주요경력</p>	<p>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전) 새누리당 대변인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전) 한나라당 대변인</p>
<p>제안단체</p>	<p>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율을 최대 40%로 허용한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u>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u>을 대표발의함.</p> <p>(2) <u>2023년 7월 13일 윤상현 의원은 YTN 뉴스큐 인터뷰에서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겁니다."</u> 라는 발언을 통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 불안감에 있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함.</p> <p>(3) 2016 총선넷 집중낙선명단에 선정                  - 2013년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불법으로 유출된 NLL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말바꾸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2015년엔 공천과 관련하여 공작정치 의혹이 있는 막말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함.</p>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22)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p>주요경력</p>	<p>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전)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p>
<p>제안단체</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선정분야</p>	<p>보건의료 분야</p>
<p>선정기준</p>	<p>-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u>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u>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 <u>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u>을 대표발의함. 이는 결국 의료계의 민영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부르게 될 것으로 우려됨.</p> <p>(2)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u>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u>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u>을 대표발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u>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u>을 대표발의하는 등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의료 민영화 및 상업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의료 공공성 훼손에 영향을 줌.</p> <p>(3)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발의, 의료영리화를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의료영리화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발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20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p>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함
--	---

(23) 이원욱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

<p>주요경력</p>	<p>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겸 사무총장</p>
<p>제안단체</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li> <li>-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이원욱 의원은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u>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함</u>. 해당 법안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큼.</p> <p>(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u>.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손)회사로 보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추후 추가 법안 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p>

(3) 영리기업의 의료진출 허용하여 공공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주고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진료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아닌 시장 확대와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친재벌적 발의 활동을 지속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발의

(24)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

<p>주요경력</p>	<p>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p>
<p>제안단체</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복지노동 분야</p>
<p>선정기준</p>	<p>- 노동협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노동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력을 제한 억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 기금 공공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고 자본과 정권 친화적 기금 거버넌스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p> <p>(2) 사회서비스원 민영화 법안 추진 [2104930]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33인)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남인순 의원안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서비스기관을 지원하고 그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사회서비스원 사업도 제한함. 사회서비스원 민영화를 추진하는 발언을 함.</p> <p>(3)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와 비대면진료 내용을 담은 <a href="#">의료법 개정안</a>과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함. <a href="#">[21237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a></p> <p>(4)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노동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력을 제한 억제하려는 <a href="#">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a>하는 등 기금 공공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함</p>

(25)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비서실장
제안단체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가덕도신공항 법안을 처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위 간사로서 기후위기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를 야기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장섬. 2023년에는 직접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a href="#">‘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a> 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2) <a href="#">2023년 11월 23일 국방위원회 회의</a> 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그게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작동해왔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대북 제재 지속,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남북의 지속된 위반행위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나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공세적인 작전’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통해 남북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11월 22일에는 효력정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북한이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헌승 의원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먼저 완전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9.19 합의 파기에 이르게 된 효력정지 의결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힘.

(26)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p>주요경력</p>	<p>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현)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 미래통합당 노동위원장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p>
<p>제안단체</p>	<p>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복지노동 분야</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노동협회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하였음.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킬러 규제 혁파’로 대표되는 환경 규제 완화에 적극 발맞추는 입법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윤석열 정부 환경 사안 일선의 파트너로서 환경 정책 악화에 크게 일조해왔음.</p> <p>-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a h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등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a href="#">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을 대표발의해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유예하여 대기 환경 보전이 아닌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을 취함.</p>

-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의무로 시행해야 할 교육, 기록 보존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냄.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게 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를 중점, 간이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

(2) 2020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하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민주당을 향해 과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폄훼함.

[2021-04-19 \(성명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2021-04-14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촉구 성명서 기자회견([링크](#))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이 만연함에도 (...)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적 관점으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과연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발언.

[2023-08-25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광우병 사태를 선동질했던 MBC나 KBS에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지 마시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과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선동질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전략적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3)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발의

(27)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주요경력	제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a href="#">[212555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a>  <a href="#">[212495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a></p> <p>(2)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a href="#">자료독점권 강화</a>' 내용을 담은 <a href="#">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a>하기도 함.</p> <p>(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a href="#">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공지능법을 공동발의</a>하기도 함.</p> <p>: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큼.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함.</p>

(28)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p>주요경력</p>	<p>제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사무총장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일보 기자</p>
<p>제안단체</p>	<p>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li> <li>-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a href="#">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a>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a href="#">2023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a>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범람을 막았다. 4대강을 안 했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함.</p> <p>(2)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악법임.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 옹호하고, 2023년 1월에는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전환의</p>

장”과 같은 망언이 쏟아진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음.

(3) [2021년 10월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됨.

(4) [2022년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발언하며 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함. 당시 경찰은 경찰기동대 등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태원에는 부대배치를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퇴진집회와 맞불집회가 오후 8시경 모두 끝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 책임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가함.

(5)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주요경력	- 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안단체	2024 총선주거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선정분야	민생경제 분야, 안전평화인권종교 분야
선정기준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2002년 대법원은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방문객, 일반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그런데 도리어 사찰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는 내용의 <a href="#">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a>해 개정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종교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종교시설의 관리비용 총당의 책임을 정부가 그리고 납세자가 떠 안게 됨. 종교단체들이 소득세혜택과 결산자료 비공개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p> <p>(2) 과잉유동성과 임대사업자 감세 특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a href="#">2020년 8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마포구가 포함되자 SNS</a>를 통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없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함. 2022년 입주를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수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8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이 많음.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기도와 인접한 자치구(17개)로 좁혀서 보면 평균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불과함. 또한 마포구보다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대문구 등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공공임대주택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 그런데도 당시 책임있는 여당의 주요 의원으로서 마치 특정 행정동을 예로 들어 민의를 왜곡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시킴.</p>

**(30)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p>주요경력</p>	<p>제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추경호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p>
<p>제안단체</p>	<p>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주주의정치개혁 분야, 민생경제 분야</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li> <li>-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li> <li>-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a href="#">[2125493]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2인)</a></p> <p>(2)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극좌파, 괴담 선동이라고 폄훼하며 광우병, 사드 전자파와 엮어 국민 분열을 조장함. <a href="#">2023년 7월엔 YTN라디오 신윤의 뉴스 정면승부</a>에 출연해 "2008년도에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관련하여 극좌파들의 괴담 선동이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라며 시민들의 오염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p> <p>(3)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a href="#">국회의원 100명을 축소하는 대국민 서명운동</a>을 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p>

(4) 2023년 10월 방송에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NPT 탈퇴하고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핵 배치를)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나서겠습니다."라는 핵무장 발언으로 남북전쟁 위기와 군비경쟁 심화시킴.

2023-11-09 [KBS일요진단 “전술핵 논란까지…안보전략 어떻게”](#)

**(31)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p>주요경력</p>	<p>제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p>
<p>제안단체</p>	<p>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 복지노동 분야, 민생경제 분야</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li> <li>-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노동협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a href="#">양곡관리법</a>, <a href="#">방송3법</a> 등의 개혁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파업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a href="#">노란봉투법을 파업 만능봉투법, 위헌봉투법으로 규정하며 노동협오적인 발언</a>을 일삼음.</p> <p>(2) <a href="#">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대표발의</a>를 통해 감세,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인 신공항에 대한 진지한 고찰없이 단순 개발 중심의 정책에 몰두함 : 관련기사 <a href="#">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a></p>

국내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공항이 건설되고 있어 [기존 공항 15곳 중 10곳이 적자](#)로 나타났고, 미래세대가 재정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국비가 100%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생색을 내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 결과에도 응답자의 66.6%가 “대구·광주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한 바 있음.

(3) [2021년 4월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민의 항의와 경고를 촉구했지만, - 2023년 4월에는 오염수 반대 투쟁에 대해 광우병 집회, 사드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먹거리 괴담’, ‘억지 선전선동’이라고 발언.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선동, 괴담이라고 폄훼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 피해자 모욕 비방, 4대강 찬동,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발의

(32)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주요경력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제안단체	경실련,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li> <li>-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li> <li>-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li> <li>-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li> <li>-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li> <li>- 대통령실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li> </ul>
구체적인 선정사유	<p>(1)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여러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만 56조 4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펄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임. 또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R&amp;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의 주요 책임자임.</p> <p>(2)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a href="#">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a>’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을 위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으로 보임. 해당 특별법안에는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2023년 7월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 "<a href="#">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관해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a>"이라고 발언하고, <a href="#">2019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까지 330억원의 소수력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봤다"</a>면서 "<a href="#">앞으로 16개 보를 모두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a>"며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인</p>

4대강 사업을 옹호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펼침.

(3) 경제분야 반개혁법안 다수 대표발의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기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도체 기업과 일반 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도체 기업 법인세 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과 증여세 공제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함.

(4)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하도록 허용해 미국식 민영화의 발판을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함.

(5) [2023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괴담 선동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정쟁화됐다”, “불안감과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정부가 그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야당의 괴담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함. 그러나 정작 본인은 2021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임.

(6)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장시간 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ILO 기본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발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임.

(33) 태영호 (국민의힘, (현)서울 강남구갑, (공천)서울 구로구을 )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제안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종부세 공제기준을 6억에서 9억원 ,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상향하는 <a href="#">종부세 완화 법안</a> 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2) 2023년 2월 페이스북에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4·3사건을 폄훼하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됨.  (3) 태영호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라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음.  (4) 2023년 9월 6일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세력은 세계에서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폄훼함.
--	--

(34) 하태경 (국민의힘, (현)부산 해운대구갑, (공천)서울 중구·성동구을)

<p>주요경력</p>	<p>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전)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전) 국민의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p>
<p>제안단체</p>	<p>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p>
<p>선정분야</p>	<p>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사회적 논란</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li> <li>-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li> <li>-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li> <li>-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li> </ul>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21대 국회의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괴담 단체였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환경단체의 활동을 폄훼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본분을 망각하는 발언과 활동을 주도한 책임이 막중하기에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p> <p>(2) 특히 공식회의석상이나 방송, SNS 상에서 막말에 가까운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행보를 보임. <a href="#">2019년엔 임시 최고위원회의</a>에서 당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바 있고, <a href="#">2023년엔 라디오 인터뷰</a>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팔푼이”라고 지칭했다고 사과한 바 있음.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a href="#">2023년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를 두고 “욱일기와 화해할 때가 됐다”</a>는 발언을 일삼아</p>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2023년 9월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북한을 도와줘서 우리를 사실상 공격을 공격 능력을 키워준다면 우리도 러시아 아파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평화를 해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음.

(3) 2016년 총선넷 낙선명단에 선정

-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에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고 과도한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남용케 할 우려가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2014.3.26)을 대표발의함

(4)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세월호 참사 수사 조사 방해,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발의

(35)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p>주요경력</p>	<p>제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특별시청 정무수석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p>
<p>제안단체</p>	<p>한국환경회의</p>
<p>선정분야</p>	<p>기후환경 분야</p>
<p>선정기준</p>	<p>-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p>
<p>구체적인 선정사유</p>	<p>(1) 허영 의원은 21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a href="#">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a>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 난개발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무거운 고찰 없이 강원도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인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 책임이 막중하기에 핵심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p>